

‘군복무 가산점 축소’등 52건 정책반영

정무장관(제2)실 ‘평등의 소리’ 1주년... 제안 475건 접수

‘동성동본 금혼 철폐’ 가장 많아... 54건 정책 추진

김미경 기자

정무장관(제2)실 ‘평등의 소리’(725-0505)가 12일로 개설 1주년을 맞았다.

여성정책에 관한 일반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해 정책 입안과정에 반영시킨다는 취지로 개설됐던 ‘평등의 소리’가 1년동안 접수한 제안은 총 4백75건이다. 이 중 ‘가족·재산’ 관련이 39.4%인 1백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용’(84건) ‘문화·사회’(24건) ‘복지’(23건) 차례로 나타났다. 단일 사안으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 철폐’가 1백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제도개선이 이뤄진 경우도 52건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안혜경(26·서울 강남구 역삼1동)씨 등 16명이 제안했던 ‘공무원시험시 군복무 가산점 철폐안’을 들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시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지난 3월 6일 가산점을 1~2%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성과를 거뒀다.

세대주가 되기 힘든 여성들이 세대주에게만 주는 금융대출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구자숙(44·서울 송파구 오금동)씨의 제안도 내무부가 지난해 7월 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세대주의 기재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하게 만들었다. 정무장관(2실)이 현재 제안 사례 중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5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제안이 많았던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를 비롯해 ‘세무대신입생 선발시 여학생 정원의 폐지’ ‘우등고속버스의 남성위주 시설 개선’ ‘택아비용의 소득공제 방안’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가족 개

념에 장인·장모 포함’ ‘의료보험 범위에 사위 포함’ ‘모계혈족 경조사때 휴가 인정’ 등이다.

또 ‘부부재산은 이혼소송 전이라도 분할이 가능하게 하자’ ‘시립탁아소를 24시간 운영하도록 해달라’ ‘프로골퍼 정년 남녀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재산권 담보시 부부 쌍방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경우 사위에게도 세무혜택을 줘야 한다’ 등 흥미로운 제안들도 많다.

하지만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등 제안 사항을 정책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무장관(제2)실 내에 ‘평등의 소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없을 뿐 아니라 홍보도 부족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운영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무장관(제2)실 조우철 조장관은 “앞으로 ‘평등의 소리’를 여성



개설 1주년을 맞은 정무장관(제2)실 ‘평등의 소리’에서는 앞으로 성차별 사례도 접수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제안 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사례도 접수받는 형식으로 방향전환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5월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설치될 ‘성차별개선위원회’에서 이들 성차별 사례들을 집중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